

마지막까지 비전보다 비방 ‘최악의 대선 토론’

굳어진 3자 대결 구도
오늘 단일화 데드라인

6·3 대선 ㉠ D-6

이재명 “투표로 내란 완전 진압”
김문수 “범죄자가 자기 방탄 독재”
북핵억제 농곤 “비핵화” vs “핵무장”
이준석 “빨간 尹 자리, 파란 尹 안돼”
정치-외교정책보다 인신공격 열목져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정치 개혁,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채널A 화면 캡처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열린 정치 분야 마지막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내란 종식”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두 사람을 모두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계엄”이라며 “6월 3일은 12·3 내란을 투표로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내란 심판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라며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 또는 특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는 선거”라며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후보들은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한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죄로 유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가”라고 따졌고, 김 후보는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5개 재판 모두 셀프 사면할 거냐”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황제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미국과의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도 공약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적 입장인데 실현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과 국정운영 비전보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비방전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사라진 난장판 토론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상대 후보는 물론 가족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공방만 이어졌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마치 뒤틀려있는 자리같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A3·4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김 후보로의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지지들과 만나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 뒤엔 입장문을 내고 “3자 대결이라는 본 선거에서 국민은 시민주권혁명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A5면에 관련기사

이공계 석학 62% “해외서 영입 제안”... 인재 유출 무방비

과기한림원 회원 200명 설문조사
제안받은 123명중 52명 “수락-검토”
이탈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이공계 석학들의 60% 이상은 최근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각국이 과학자 우대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흡수하는 동안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인재를 빼앗기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한림원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5%

에 해당하는 123명이 최근 5년 이내에 해외 국가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제안을 받은 응답자 중 42%(52명)는 제안을 수락해 해외에서 연구 중이거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을 받지 않은 77명도 83%(64명)는 제안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계 석학들의 두뇌 유출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영입을 제안한 국가를 보면 응답자 중 82.9%가 중국에서 제안을 받았으며 미국이 26.8%, 싱가포르가 10.6%로 뒤를 이었다(복수 응답). 영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요인으로는 54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은 ‘영입 기관이 제안한 고용 조건’을, 55세 이상은 ‘국내 석학 활용 제도 부재’를 1순위

로 꼽았다.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최근 글로벌 각국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연구자 맞춤형’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 과학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느끼는지를 파악해 그 부분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젊은 교수들에게는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비를 제안하고, 정년을 앞둔 석학들에게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을 제안하는 등 ‘맞춤형 접근’을 한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A2면에 관련기사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이달 중순 조치... 이상민 출금 연장
계엄 문건-내란 동조 의혹 등 수사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당일 실제 행동을 대조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훈 안보수사국장)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도 최근 연장됐다.

경찰은 전날(26일) 이들을 불러 헌법재판소,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과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이 왜 서로 다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이들 중 일부가 계엄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국회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상환 payback@donga.com·전남희 기자
▶A8면에 관련기사

10th 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SEOUL 2025

ARTS COUNCIL KOREA

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은퇴후에도 연구지원 한다더니... 화학과 교수를 교무처 배정

〈명예특임교수〉

〈상〉 한국 떠나는 이공계 석학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로 일하던 A 씨(68)는 최근 정년을 채우고 2023년부터 ‘명예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학 측이 은퇴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자리다. 그런데 명칭만 그럴듯하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우선 연구 공간과 재원 문제 때문에 본래 전공이던 화학과가 아닌 교무처 소속으로 바뀌었다. 연구실도 제공되지 않았고 학생 선발도 불가능해 교수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연구비 내에서 임차료와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 A 씨는 “이름만 명예 교수지 아무 지원도 없다”며 “6~7년 전 중국에서 영입 제안이 왔을 때 갔어야 했다는 후회가 지금도 든다”고 털어놨다.

국내 이공계 석학들의 두뇌 유출은 이처럼 국내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과학자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들을 ‘한국 탈출’이라는 막다른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회원 200명을 설문한 결과 80%가량은 “한국의 두뇌 유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수십억 연구비 보장, 자녀 학비 지원 등 파격 제안
27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석학을 겨냥한 해외 기관들의 파격적인 영입 제안은 상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사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한 달에 3~4번은 중국에서 영입 제안이 온다”며 “연봉은 8억 원 수준이고, 연구비도 수십억 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한림원 회원인 한

과학자는 “3년간 200억 원을 보장한다는 제안까지 받아봤다”며 “응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 털어놨다.

국내 출연연 실장급 연구원은 “최근 중국에서 아마존급 연봉을 주겠다고 제안이 왔을 때 자녀 교육 문제 등 가족 이슈가 없었다면 솔직히 갔을 것”이라며 “이런 연봉을 제시받으면 혹하는 감정과 함께 좌절감이 몰려온다”고

이름만 ‘명예교수’, 연구실도 없어
임차료-연구원 월급 직접 충당해야

“3년간 200억 보장 제안 받아봐
혹하는 감정 함께 좌절감 밀려와”

석학 1명 유출, 작은 연구소 떠나는 격

했다. 해외 이주를 망설이는 석학들에게 자녀 국제학교 등록금이나 주거 비용 등 추가 지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잦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R&D 예산과 불필요한 행정 규제도 젊은 과학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국립대 화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40대 교수 B 씨는 얼마 전 유럽 대학으로 이직했다. B 씨의 사정을 아는 한 교수는 “연구비를 따기 위해 써야 하는 제안서, 또 성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을 항상 답답해했다”며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국 과학 석학 ‘해외 유출 현황’ 설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856명 중 설문에 응답한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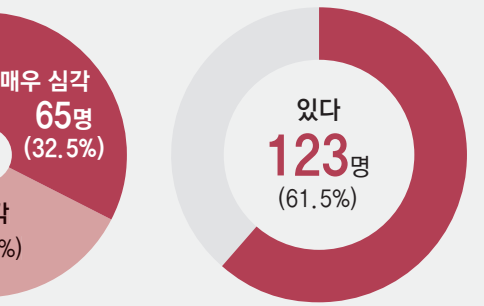
5월 3~14일(12일간).
45세 미만(21%), 45~54세(20%),
55~64세(31.5%), 65세 이상(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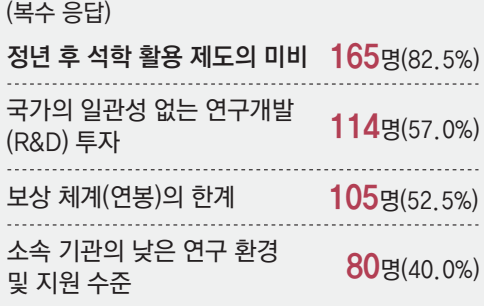
●‘석학 1명 유출은 ‘작은 연구소’ 통째로 떠나는 셈’
한림원 회원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두뇌 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국가의 일관성 없는 R&D 투자’(57.0%), ‘보상 체계의 한계’(52.5%), ‘낮은 연구 환경 및 지원’(40.0%) 등을 꼽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년 후 석학 활용 제도의 미비’(82.5%)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연구 역량과 노하우, 학계 네트워크를 쌓은 국

내 석학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내 과학계에는 뼈아픈 타격이다. 특정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진을 구성하고, 학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연구를 해 나가는 전 과정을 통째로 빼앗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일부 교수들의 경우 함께 연구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인재를 영입하는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며 “석학 한 명을 영

최근 한국의
두뇌 유출 수준은?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최근 5년 내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입해서 작은 연구소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타국으로 옮겨간 국내 과학자가 이뤄낸 과학 성과는 오롯이 그 나라의 것이 된다. 정진호 과기원장은 “중국의 영입 조건을 보면 연구비를 대규모로 지원해 주는 대신 연구에 따른 특허는 중국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최지원 jwchoi@donga.com·장은지 기자

“정부 연구비 계약서도 못믿을 만큼 신뢰 바닥... 예산 불확실성 해소 급선무”

석학들 “美-中처럼 고연봉 못주면
연구비 걱정이라도 덜어줘야”

젊은 과학자들 “우릴 계약직 아닌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주길”

정부, 인재 DB화 ‘K링크트인’ 추진

국내 과학기술 분야 석학들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불확실성을 줄여 과학기술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비 걱정 없이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혁신적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센티브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최근 국내 석학 5명과 간담회를 열

고 한국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들었다. 대담에는 김윤영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석좌교수, 오우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장, 조길원 포스텍 유니버시티 교수,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윤효재 고려대 화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안정적 R&D 예산 확보를 첫손에 꼽았다. 조길원 교수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과학자들에게 너무 큰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제는 정부와 쓴 연구비 계약서마저 믿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우택 소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 제도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과학자들을 국내에 잡아두고 싶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미국 중국만큼 고연봉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국내에서 연구를 이어나가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석학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김근수 교수는 “현실적으로 연봉을 크게 높일 수 없다면 안정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과학자에 대한 철저한 예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영 석좌교수는 “은퇴를 앞둔 시점에 정말 좋은 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일종의 무형문화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양원(중국과

학원, 중국공정원)이 선정하는 최고 과학자 직책인 원사로 뽑히면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젊은 과학자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하다. 45세 이하 젊은 과학자들이 소속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들은 “과학기술인을 계약직 연구노동자가 아닌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 연금형 장기보상 등 실질적 복지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KAST 소속 윤효재 교수는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에 운명을 걸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더는 세계 무대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YKAST 간사인 권순경 경상국

립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단기 연구비 지원만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대학-연구소-산업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유정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는 “시류에 휩쓸려 너무 많은 관심과 예산이 인공지능(AI) 등 특정 분야로만 쏠릴 경우 기초과학 분야가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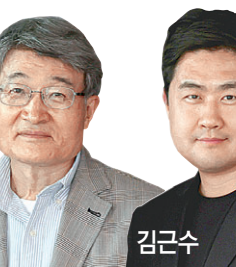
과학기술 인재 현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정부와 민간에 산재해 있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연구 역량과 현황 등을 한데 모아 기업들이 인재 영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K링크트인’(가칭) 구축을 추진 중이다. ‘K링크트인’ 아이디어는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이 과기부가 주최한 인재 대책 간담회에서 “기업도 인재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원 jwchoi@donga.com·장은지 기자



김윤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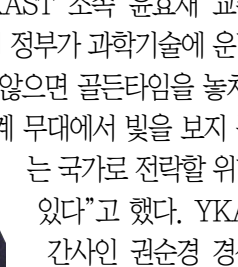
오우택



조길원



김근수



윤효재

아이 낳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진짜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구할 영웅들부터 지켜줘야죠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안심하고 가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영웅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여섯살까지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거점을 마련,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혼 출산까지 포용하는 사회로 만들어
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선택을 지지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한미연 올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Korean Peninsula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우리는 모든 후보와 정당에 열려 있습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자문이 필요하시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 철새가 정치를 망친다



오늘과 내일
신광영 논설위원

생각할수록 황당한 양당 대선 캠프의 외부 영입 사례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국민참여본부 부분부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선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삼입고 문에 위촉한 뒤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황당한 양당의 김대남 정호용 영입 소동

김 전 행정관이 왜 이재명 후보로 갈아타려 했는지는 그가 지난해 총선 탈락 후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눴던 통화 녹취에 드러나 있다.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서 연봉 잘 받으면서 다음 대권에 누가 나올 건지 예의주시해서 다시 올라타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건설업계 출신인 그는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지난해 총선 낙마 후엔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서”란 말대로 금융권 경력이 없음에도 연봉 3억 원의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을 꿰찼다. 이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이 후보 쪽으로 올라타려는 그에게 부본부장을 달아줬다. 김 전 행정관은 캠프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하루 만에 돌변해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는데 민주당이 영입하려던 사람의 공작관이 이런 수준이었다.

국민의힘이 위촉했던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에 가담해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김 후보 캠프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석동현 변호사도 합류시켰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돼 처리되는 선거란 점을 외면한 황당한 일이다. 큰 선거에선 지지층을 넓히는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단,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정치적 상징성이 있고 국민 통합 효과를

발휘한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은 공화당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폴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비락 오바마 지지 선언을 끌어낸 적이 있다. 파월 전 장관은 이라크전을 옹호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공화당 우경화에 반대한다며 오바마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오바마 집권 후에도 공직을 맡지 않았다.

여야의 이번 대선 캠프에는 전현직 교수들과 법조인, 판로, 언론인들이 모여들고 있다.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양쪽 캠프에 보내고, 자문단에 앓다튀 이름을 올리는 교수들이 요즘도 많다. 줄만 잘 서면 정권 창출 후 한자리 꿰찰 수 있다는 출세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해외에도 학자 출신이 현실 정치에 족적을 남긴 사례가 있지만 우리처럼 선거 때마다 수많은 교수들이 이곳저곳 기웃대며 정치권에 ‘보함’을 드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 캠프가 정치 철새들의 도래지로 변질된 건 정당이 가치 공동체가 아닌 이익 공동체가 돼버린 자화상을 보여준다. 정당 간의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하고, 인물 중심에 승자 독식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언제든 점퍼를 바꿔 입을 준비가 된 부나방들이 몰린다. 정당들 역시 한 표라도 득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이기고 보자며 검증 없이 세 불리기에 매달린다. 얼마 전 김 후보 캠프에서 교사 수천 명에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임명장과 함께 무차별 발송했는데 캠프 운영이 이렇게 허술하면 철새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한자리 달라” “이기고 보자”의 결탁

유권자들은 이런 문제를 알아도 상대 정당이라고 더 나을 게 없어 선택을 바꾸지 못한다. 그 결과 집권의 과실은 정치 철새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약 1만 개의 자리를 받으려 대기표를 뽑아 든 이들이 정권 주변을 에워싼다. 3년 전 윤 전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가 파면된 뒤에도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기어 내려올 정도로 이들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이런 생태계가 유지되는 한 정치는 나아지기 힘들다.

neo@donga.com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58〉

모든 선택의 결과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야.”
—크리스토퍼 매쿼리 ‘미션 임파서블’

TV 시리즈로 시작한 1996년 톰 크루즈의 영화로 재탄생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제목처럼 늘 불가능한 미션이 극에 등장한다. 최근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전편이었던 ‘데드 레코닝’의 파트2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선 헌트(톰 크루즈)에게 주어진 미션은 엔티타라는 인공지능(AI)과 대결하는 것이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한 AI 엔티타에 의해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엔티타는 끝내 핵전쟁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흥미로운 건 모든 디지털 세상을 장악한 엔티타와 상대하기 위해 헌트는 디지털 탈과의 모든 접속을 끊고 아날로그로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결 방식은 지금껏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크루즈가 대역 없이 아날로그 액션을 펼쳤던 그 상황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그의 아날로그 액션은

진짜 저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일갈을 담은 이 작품의 메시지와도 공명한다.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야.”

이번 시리즈에서 헌트의 동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미션을 수행하며 던지는 이 대사 역시 크루즈를 떠올리게 한다. 그전 마치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통해 보여준 일련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목숨이 도대체 몇 개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역 없이 스스로 모든 액션을 소화한 그의 선택은 미션 임파서블의 시그니처가 됐다. 관객들은 컴퓨터 그래픽(CG) 대신 맨몸 액션을 펼치는 크루즈가 이번에는 어떤 진짜 액션을 보여줄 것인가에 기대를 모았다.

우리네 삶에 있어서도 그냥 생겨나는 결과가 과연 있을까. 거기에는 일련의 모든 선택들이 겹쳐 있기 마련이다. 6·3 대선의 선택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들이 모여 앞으로의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 말이다.

대중문화평론가

社說

‘이런 황폐한 풍토서 정치 개혁 될까’ 묻게 한 대선 TV토론

27일 열린 6·3 대통령선거 마지막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극단적 양극화의 진원지임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네거티브 공격과 상호 비방전에 열을 올렸다. 후보들은 각종 정치 개혁과 개헌 공약도 제시했지만, 이런 황폐화한 정치 토양에서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깊은 의구심만 남겼다.

각 후보는 한결같이 자기만이 대화와 협치를 복원할,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권력 구조와 선거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몇 마디 외엔 상대에 대한 일방 공세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가장 극단적 형태가 비상계엄”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역설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입법 행정 사법 삼권 장악 시도야말로 방탄독재 괴물독재의 신호탄”이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두 거대 정당을 ‘비상식’과 ‘반원칙’ 세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각 후보는 상대의 해명을 요구받으면 “그러는 당신은 어때냐”는 회피성 비방이나 말꼬리 잡기로 맞섰고, 아예 해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대한 김 후보의 모호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김 후보

가 당선되면 상황 내란수괴가 귀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부패와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이 후보의 수많은 재판 혐의를 일일이 열거하고 주변 인물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까지 거론했다.

외교·안보 공약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후보들은 상대를 향해 ‘친○’ ‘반○’ 같은 잣대로 갈라치기에 바빴다. 이재명 후보는 “합자량만 하는 강경책이 능사가 아니다”고 윤석열 정부와 김 후보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고,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거론하며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방 속에 주한미군 재조정이 나 북·미 직거래 가능성 같은 다채를 안보 환경 격변에 대한 대응책은 없었다.

이번 대선 of 세 차례 TV토론은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기대 이하였다. 유권자에게 아예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후보들의 합작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TV토론은 후보의 철학과 식견, 비전을 듣고 자질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반감과 편견을 노골화하는 정치권의 대결, 나아가 그 근처에 강경 지지층의 팬덤 정치가 판치는 현실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뤄질 리가 없다. 이대로라면 한국 정치의 장래는 여전히 어둡다. 엿새 뒤 승자가 누구일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개혁임을 새삼 일깨워주는 요즘이다.

출국 금지된 한덕수-최상목… 계엄 당일 어떻게 했길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6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의 출국도 금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실제 행적이 계엄과 관련 없다는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들 중 일부가 계엄에 동조했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세 사람은 모두 윤 전 대통령한테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고 회의 뒤 양복 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쪽지를 받지 않고 멀리 책상 위에 놓인 걸 보기만 했다고 했다. 이들의 진술 모두 상식적으로 의문이 드는 구석이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세 사람의 이후 행보는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혼란을 키웠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 최 전 부총리가 야당의 탄핵을 이유로 돌연 부총리직을 사퇴한 것도 뒷말을 낳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 없었던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어떤 지시를 한 게 있는지, 계엄 문건 전달 과정의 진실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 하는 이유다. 이뿐 아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대통령경호처가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계엄의 진상을 규명할 새 증거들이 잇따르는 만큼 계엄 관련자들의 거짓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낱알이 가려낼 필요가 있다.

과학 석학 62% “해외 영입 제안받아”… 있는 인재도 다 내줄 판

한국 과학기술을 이끄는 석학 10명 중 6명이 해외 국가로부터 영입을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울한 연구 환경에 절망한 많은 석학들이 해외에서 제시하는 파격적인 조건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국가석학 1, 2호 학자를 잇달아 중국에 빼앗긴 데 이어 핵심 인재들의 ‘탈한국’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계 각국이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는데, 한국은 데려오기는커녕 그나마 있는 인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인 123명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답했다. 제안을 받은 석학 중 42%는 이를 수락했거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제안을 받지 않은 석학 중 83%는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외 국가들은 한국 석학들에게 아무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

두할 수 있는 환경을 약속하며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젊은 학자들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비뿐만 아니라 가족 이주 및 자녀 교육 지원까지 제안했다. 정년을 앞둔 석학들에게 은퇴 걱정 없이 장기 연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연구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 역량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석학 한 명이 해외로 나가는 건 작은 연구소 하나가 통째로 빠져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과학계는 우려한다. 당장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미래의 과학 인재를 길러낼 동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대선 후보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하지만 핵심 인재 확보 계획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진 것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두뇌 유출은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간다!

“미친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본회퍼(Dietrich Bonhoeffer)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이승만광장 동화면세점, 교보문고 앞(광화문역 3번, 4번, 6번 출구)

5월 31일 끝장내자! 걸을수있는 사람 다 나오라!

헌법 전문 4.19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저항권을 완성하자

집회정보·참여신청



국민대회.com

자유통일 위한 천만조직 10대 조직 서명사이트 <https://clpartywatch.com> 서명사이트 <https://clpartywatch.com/yoon>



참여단체 : 5.18역사해결전진상대책국민연합, KLO, KO-US, 경북예국시민연합, 고대교우트루스트협회, 광화문회복기회, 구국총연합민병단, 국가재건원로회의, 국민노동조합, 국민저항운동본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기독교장로회, 나라사랑총연맹, 대한민국3.1회, 대한민국공산당연방, 대한민국기생양외, 대한민국수호혁명위원회, 대한민국수호호국단, 대한민국예국단체총연합, 대한민국적진회의, 대안예국동지회, 대안예국국민회의, 북한예국시민연합법수호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사)자유민주주의연대, 사)한태평양문연연구회, 서울약부모임, 순복음나라사랑,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연마방송, 연마부대, 여성정책연구회, 월드시니어 유니온, 올인원, 육군기행사관구국동지회, 은기비마하나임, 여성자유민주예국연대, 인천예국시민단체연합, 임시각오구국목회자연맹, 자유대연합, 자유민주주의운동본부,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예국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국교회지키기, 전국국민의병대, 전국기독교시민단체, 전국대학연합구국동지회, 전국여성구국총연합, 전국여성성스크럼크, 정책피해자모임, 주권수호국민연대, 탈북자동지회, 태극기예국시민연합, 태풍예국단, 파주예국시민연합, 한국자유수호협회, 한국침전미군심종지거역연대, 한국티처자연맹,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국민침전미서명단, 나리지킴이고교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해병대 예국기동단, 호국총연합, 전군구국동지자연맹,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장교단,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해병대사관구국동지회, 국간사구국동지회, 육군3사구국동지회, 갑종중교구국동지회지, 간부사관구국동지회, 해군 OCS구국동지회지, 공군학사구국동지회, 국가원로회의, 태평연합회, 알오티씨예국동지회, 기독교장로회, 자유평화통일문학회, 자유시민연합, 알오티씨자유연대, 실형민중협회, 자유마음, 기독교시민연대, 사)한국기독교교단총연합회, 대한민국성도연합, 순복음예국성도연합회 1460개 시민단체.

주최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문의 : 1544-7166